

해운산업위, 선원일자리 창출 방안 합의

- 노사 공동 자원 마련, 해기사 일자리 만든다
- 산업정책에 일자리 연계 모델, 업종차원의 확산 기대

한편, 해운산업위원회(위원장 한종길 성결대학교 교수, 이하 위원회)는 2월 20일(목)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26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해운산업의 지속가능발전과 선원일자리 창출’을 위한 합의를 채택했다.

위원회는 한진해운 파산 등 어려워진 해운산업의 재건과 선원일자리 창출을 위해 발족했다.(2018.11.23.) 위원회는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한국선주협회와 해양수산부(일부 의제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참여하여 지난 13개월 동안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핵심 정책에 선원고용을 연계하는 방안과 선원일자리 노·사·정 공동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합의의 주요 영역은 △선원일자리사업 시행, △화물 확대와 고용 연계 방안, △신규 선박건



조와 고용 연계방안이다.

먼저, 선원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노·사가 향후 10년 동안 매년 각 5억 원씩 재원을 출연하여 한국 상선에 승선하는 한국인 해기사의 일자리 창출 사업 전개에 앞장서기로 했다. 정부도 노·사의 노력에 공감하고, 향후 공동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담았다.

그리고, 화물확대와 고용 연계방안과 관련하여 가스, 원유 등 해외 전략 물자 구매 시 계약 평가에 고용창출 효과를 지표에 포함하는 등 운송 화물 확대와 국내 고용창출이 가능한 방식의 평가로 전환토록 했다.

마지막으로, 신규선박건조와 고용 연계방안과 관련하여 신규선박건조 투자사업 지원 대상 선정 심사 시 평가지표에 한국선원 승선율을 중요 평가 항목으로 신설하는 등 실질적으로 정부의 산업지원 정책이 일자리 확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합의는 경사노위 출범이후 이뤄낸 첫 업종별위원회 합의로서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첫째, 노·사·정이 합심하여 정규직 선원일자리 확대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노사가 우선 일자리 사업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여 마중물을 만들고, 정부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업종 영역에서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일자리 사업 모델로 다른 산업에도 확산될 것을 기대한다.

둘째, 산업(재건)정책에 일자리 창출 방안 연계한 모델로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운재건 5개년 계획*(2018 ~2022)과 한국선원 고용 증대를 구체적으로 연결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중장기적으로 연계 정책의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해운재건 5개년 계획 : 해운 재도약을 넘어 수출 경쟁력 확보, 지역경제·연관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성장전략(2018.4.5.)

셋째, 이번 합의는 경사노위 출범이후 첫 번째 업종별위원회 합의로서 중범위 수준으로서 업종(산업)별 사회적 대화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을 기대한다. 지금까지 산업정책 수립에 있어 사회적 파트너의 목소리가 균형 있게 수용되지 못했다는 한계를 딛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산업정책의 내용을 신설·조정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향후 산업정책 거버넌스 운

영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이날 전체회의에 이어 마련된 「해운산업위원회 합의 선언식」에 참석한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의 정태길 위원장은 “지금까지 정부가 시행해왔던 해운업 지원 정책이 선사와 선주에게 집중되었다면 이제부터는 선원의 일자리를 확보하고 고용의 질을 높여서 노·사가 함께 상생하고 성장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합의문은 우리 선원 노동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해운업계 역사에서 아주 획기적인 이정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선주협회 정태순 회장은 “해운은 우리나라 산업에 동맥과도 같고, 선원들이 제4군의 역할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우리 선원들이 이번 기회를 발판삼아 세계 최고의 선원들로 다시 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해양수산부 문성혁 장관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가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이번 경사노위의 합의를 계기로 우리 선원들의 고용환경이 크게 개선되어 해운재건을 단단히 떠받치는 버팀목이 되고 우리나라 해운의 미래를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업종별 대화의 첫 성과물이란 점을 강조하며, “이번 합의에 이어 다른 업종에서도 대화가 활성화되고 의미 있는 합의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으며, 경사노위 문성현 위원장도 “산업정책 내 일자리 정책을 연계하고 노·사·정 공동으로 일자리 지원 사업을 전개하는 사회적 합의는 한국 사회적 대화의 역사 상 중대한 전환점을 의미한다”며, “노사의 결실을 정부가 합당하게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개진했다.

끝으로 해운산업위원회 한종길 위원장은 “이번 합의를 통해 줄어들던 한국인선원 정규직 고용이 점진적으로 증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운산업 재건이 노·사·정의 참여와 노력으로 더욱 힘차게 추진되는 효과를 기대한다”며, “특히, 청년 해기사들의 취업 기회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운산업의 지속가능발전과 선원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운산업위원회 합의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해운산업위원회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정부의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균형 있는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양질의 선원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사·정 및 공익위원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여 왔다. 이러한 공감대 위에서 위원회는 지속가능한 해운산업발전과 선원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합의한다.

1. 선원일자리사업 시행

- 1-1. 노·사·정은 한진해운 파산 이후 어려워진 해운산업 고용 환경을 고려하여 선원 정규직 일자리 창출과 유지사업 등을 진행한다.
- 1-2. 정규직 일자리 창출사업은 한국 상선대에 한국인 해기사를 우선 고용하는 것을 목표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 1-3. 동 사업에는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합의 정신을 살려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과 한국선주협회에서 매년 각각 5억 원을 출연한다. 정부는 동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한다.
- 1-4. 동 사업은 2020년부터 필요한 절차를 추진하고,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노·사·정이 별도 협의하여 정한다.

2. 화물 확대와 고용 연계 방안

- 2-1. 가스, 원유 등 전략물자 도입 시 FOB* 인도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해운산업 발전 및 국적선원 고용창출에 지속적으로 기여한다. * FOB : 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계약
 - － 전략물자 관련 공기업의 계약 평가지표에 국적선원 일자리 창출 등의 외 부효과를 평가하는 ‘부대 효과’를 감안한다.
- 2-2. 국적선원에 의한 안정적인 에너지 운송체계 구축 노력의 일환으로 ‘에너지 안정 운송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를 노·사·정이 공동으로 추진한다.

3. 신규선박건조와 고용 연계 방안

- 3-1. 신규선박 건조 투자사업 지원대상 선정 심사 시 평가지표* 중 ‘정책 부합성’ 지표 내에 보유선박(필

수, 지정선박 제외) '국적선원 승선율'을 우선 순위 세부 평가항목으로 신설하고 총배점 100점 중 10점 이상으로 반영한다.

* 평가지표 : 기업 신용도(배점 25), 담보력(30), 사업성(25), 정책 부합성(20), 지원 형평성 등(가감 점, +10/-10)

3-2. 금융지원상품 이용대가 산정 시 보증료 할인·할증 기준 14개 항목 중 '해운산업관련 동반성장 효과' 내에 '국적선원 승선율'을 추가한다.

- 신조금융을 지원하는 선사의 기존선대 국적선원 승선정도에 따라 기본 요율의 최대 4%까지 할인을 추진한다.

3-3. 투자 수익률 할인기준에 '국적선원 승선율'을 포함한다.

2020. 2. 20.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해운산업위원회